

복지재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060 재정전망의 문제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동열 (서울연구원 연구원)

1. 서 론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이중화, 세계적 경제위기 등 불안한 경제사회적 조건들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키웠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촉발된 ‘무상복지’ 논쟁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 확대가 정치적·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류적 기조로 자리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되는 반면, 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지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복지제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만 해도 2060년에 국가부채가 62.4%까지 급증하여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핵심 재정지출 유발요인으로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비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을 지목하며 당장 이를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방식은 복지 지출증가가 국가채무를 유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보수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이다.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성장과 분배가 양립가능한가?’에 대한 명제로 매우 오랜 논쟁이 있어왔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한 적은 없다. 단지, 시기적으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우세하거나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면 논쟁을 이어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장우선주의와 분배우선주의의 상반된 견해가 팽팽하게 맞닥뜨린 국면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르러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에 도달하여 서구 복지국가보다 30~40년 뒤늦게 복지국가 진입하였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조건이 서

구 복지국가의 발전시기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위주의 완전 고용구조가 붕괴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하고,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해져 복지재원을 부담하는 인구의 상대적 축소가 심각한데, 장기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면서 대규모의 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김연명, 2016). 이와 같이 복지재정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재정압박도 커지는 상황에서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클 수밖에 없다.

시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한 목표라는 명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엄밀하게 입증된 바 없는 경제학자들의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고,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기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준구, 2015)과 ‘친복지 진영’이 사회복지확대를 주장할 때 ‘인권’, ‘재분배’ 또는 취약계층의 보호 등이 논리적 근거를 이루었는데 복지지출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면 이런 논리들은 복지 확대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는 주장(김연명, 2016)과 같은 경제학과 사회복지학자들의 자성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60 장기재정전망’과 같은 정교화 된 방법과 복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잠식한다는 논리로 복지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증적이고, 정교화 된 방법과 논리로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분배 또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적 기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논리적,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분석한 이유는 이런 맥락에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하는가? 과연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통해 소극적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¹⁾.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하는가?

2016년 정부 복지관련 예산 122조 원, 전체 정부 예산의 31.8%, 206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3.8%, 복지지출 5.4%라는 수치가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지지출이 결코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개발에 대한 재정지출은 경기부양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복지지출은 소비적인 지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저항감도

1) 소극적 논리 전개라고 하는 이유는 복지지출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보다는 최소한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자칫 과장된 주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재정의 기능,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정학, 경제학적으로 이론적 검토와 정교한 논리적 전개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크게 작용한다. 정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도 이런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복지지출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초기 진입단계에서부터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다. 1970~1980년대부터 트릴레마를 경험해 온 서구 복지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최영준(2012)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과 지지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따라 복지국가는 서비스 경제에서 소득 평등, 고용증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만 달성하고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거나 또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집권세력이 평등주의적 분배결과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직접적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지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적 지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에 이론들을 참고해 볼만하다. 오코너(1973)는 '현대 국가의 재정위기'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근본적으로 이윤이 발생하여 자본축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 또는 사회적 안정(social stability)의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재정은 '자본축적(accumulation)'과 '정당화(legitimization)'라는 두 가지의 모순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재정은 이러한 두 기능에 대응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정당화를 위한 '사회적 소비(social expenses expenditure)'지출을 하는데, 사회적 자본지출은 노동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직접적으로 자본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지출과 사회보장비 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내림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소비지출을 한다. 또한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특정 계급 또는 인구가 희생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을 방지하고 자본축적과 관련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비, 주택, 보건, 기타 빈곤구제 프로그램과 같은 축적과 관련성이 약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강병구(2011)는 사회지출은 성장효과와 함께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ation)을 강조하면서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는 취약한 내수 기반으로 인해 해외부문의 충격에 따른 경제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효과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지출 수준이 낮고, 낮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가족 관련 사회지출 비중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내재한 미약한 근로유인이 자동안정화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았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정부 재정이 사회적 기능을 위해 배분되어야 하고, 사회기능에 지출된 재정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분배와 성장 간에 대립 논쟁 속에서 관련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사회투자 전략, 소득주도 성장 전략, 포용적 성장전략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면서 복지정책의 경제적 성과들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투자전략은 전통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보다 사회적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회의 재분배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즉,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가능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인구를 많이 늘려서 고용량과 고용의 질을 높이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 및 투자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경제유인체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도 고제이(2014), 원종욱(2015) 등 사회복지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료 부담 감소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 감소에 따른 편익이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설 및 운영은 건설업, 부동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산업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유발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나아가 간접적으로 다른 산업에도 연속적으로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

서비스 경제 체제에서 복지재정 지출은 사회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주요한 정책수단도 될 수 있다. 그동안 복지정책의 성과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주로 평가되었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복지재정 지출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자료 수집

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080), 보건(090)분야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는 2016년 정부 제출 예산안 중 ‘2016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활용하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고,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 후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기능별 보건·복지 분야의 세부 예산 구조와 해당기관 및 기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경제적 파급효과 계산식

분야	부문	해당 기관 및 기금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082 취약계층지원	
		083 공적연금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092 건강보험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2) 분석방법

정부의 보건·복지예산 지출의 생산유발효과,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하는 산업 간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최종수요와 생산 및 고용, 부가가치 등의 관계

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먼저 생산유발계수는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말한다. 총 산출액은 당해 기간의 해당 경제 최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직·간접 생산액의 합계로, 최종 수요가 주어지면 생산 시스템인 생산유발계수에 의해 국내 총 산출이 결정된다.

$$\begin{aligned} Ax + y - m - z &= x \\ x - Ax &= y - m - z \\ (I - A)x &= y - m - z \\ x &= (I - A)^{-1}(y - m - z) \end{aligned}$$

* $(I - A)^{-1}$: 생산유발계수
* $(y - m - z)$: 최종수요

*A: 투입계수행렬, X: 산출액 벡터, Y: 최종수요 벡터, M: 수입 Z: 잔폐

생산유발계수는 두 가지로 산출할 수 있다. $(I - A)^{-1}$ 형은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은 경쟁 수입형 투입산출표의 투입계수를 기초로 도출하고, $(I - A^d)^{-1}$ 형은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비경쟁 수입형 투입산출표의 투입계수로부터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I - A)^{-1}$ 형으로 분석하였다.

A^d : 국산투입계수행렬 A^m : 수입투입계수행렬

고용관련 (유발)계수는 전업 환산 기준의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²⁾하는데, 고용계수는 임금근로자로 고용된 피용자 수로 산출하고, 취업계수는 피용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취업자 수로 산출한 것이다.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직접고용효과)

$$\text{고용계수 } l^e = l_i^e / x_i \quad l_i^e: \text{피용자 수}$$

$$\text{취업계수 } l^w = l_i^w / x_i \quad l_i^w: \text{취업자 수}$$

2) 전업 환산 기준(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동일 산업의 전업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계한 취업자 수를 의미

- 취업유발계수 : 산출액 10억 원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

$$x = (I - A^d)^{-1}(y^d - z)$$

2016년 보건·복지예산 201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사용하였고, 대분류(30)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 예산을 2014년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가 2010년 실측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이며, 현재 2014년 연장표까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³⁾.

승수 및 파급효과 계산식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경제적 파급효과 계산식

구분	승수	파급효과
생산	$(I - A)^{-1}$	$(I - A)^{-1} \Delta F$
부가가치	$A^V(I - A)^{-1}$	$A^V(I - A)^{-1} \Delta F$
고용	$l^W(I - A)^{-1}$	$l^W(I - A)^{-1} \Delta F$

3.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 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은 391.5조 원, 총지출은 386.7조 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지출이 122조 원(31.7%)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높다. 한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SOC 와 같은 산업분야 예산을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3)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5년 단위로 산업연관표를 조사하여 작성한다. 실제 조사하여 작성되는 표가 실측표이고, 비조사기간에는 부분적인 조사를 통해 연장표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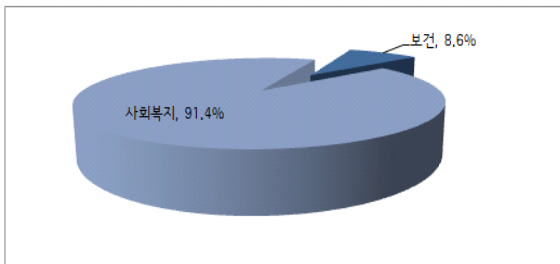
〈표 3〉 2016년 정부의 분야별 예산안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증감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지출	375.4	100.0	386.7	100.0	3.0
1. 보건·복지·노동	115.7	30.8	122.9	31.8	6.2
2. 교 육	52.9	14.1	53.2	13.8	0.5
3. 문화·체육·관광	6.1	1.6	6.6	1.7	7.5
4. 환 경	6.8	1.8	6.8	1.8	0.4
5. R&D	18.9	5.0	18.9	4.9	0.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4.4	16.1	4.2	△2.0
7. SOC	24.8	6.6	23.3	6.0	△6.0
8. 농림·수산·식품	19.3	5.1	19.3	5.0	0.1
9. 국 방	37.5	10.0	39.0	10.1	4.0
10. 외교·통일	4.5	1.2	4.7	1.2	3.9
11. 공공질서·안전	16.9	4.5	17.5	4.5	3.0
12. 일반·지방행정	58.0	15.5	60.9	15.7	4.9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 122조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111조 원으로 91.4%, 보건 예산이 10조 원으로 8.6%이다.

〈표 4〉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 현황(2016년)

	금액(백만원)	구성비(%)
총계 (보건+복지)	122,272,555	100.0%
보건	10,499,775	8.6%
사회복지	111,772,780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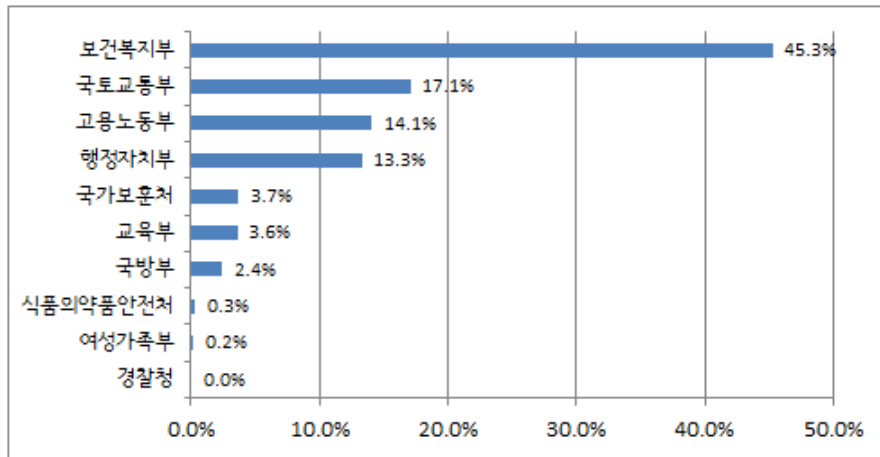


해당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 원, 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예산이 17조 원, 행정자치부 예산이 16조 원이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보다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행정자치부)과 같은 사회보험 급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 부처별 예산 현황(2016년)

사회복지·보건 분야(2016년)			
부처	분야	금액(백만원)	구성비(%)
경찰청	복지	22,515	0.0%
고용노동부	복지	17,225,282	14.1%
교육부	복지	4,358,892	3.6%
국가보훈처	복지	4,535,653	3.7%
국방부	복지	2,986,682	2.4%
국토교통부	복지	20,870,398	17.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55,355,156	45.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	396,130	0.3%
여성가족부	복지	279,493	0.2%
행정자치부	복지	16,242,354	13.3%
총계		122,272,555	100.0%

〈그림 1〉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부처별 예산구성(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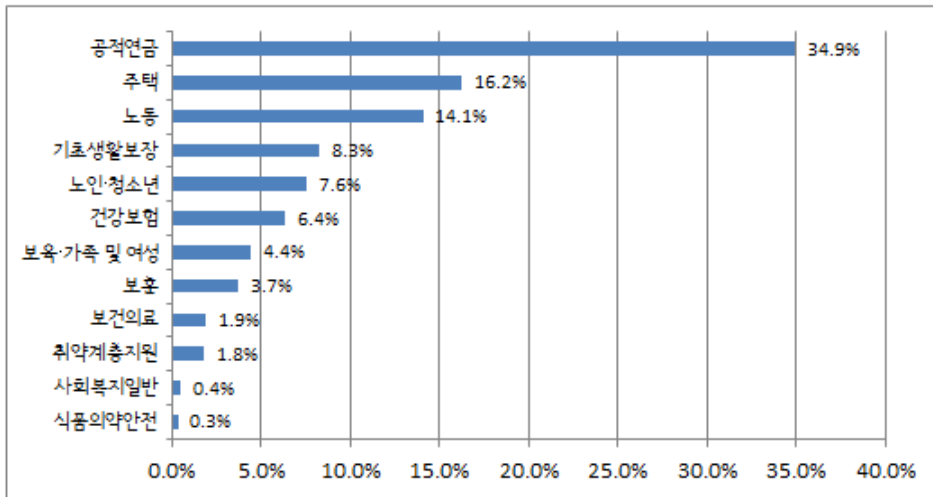


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예산이 42조 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예산 19조 원, 노동 예산 17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세 부분의 예산만 78조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68%가 되는데 이 중 77조 원이 기금예산이다.

〈표 6〉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 부문별 예산 현황(2016년)

사회복지·보건 분야(2016년)			
분야	부문별	금액(백만원)	구성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10,130,575	8.3%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2,191,165	1.8%
사회복지	공적연금	42,692,483	34.9%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5,360,822	4.4%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9,252,555	7.6%
사회복지	노동	17,225,282	14.1%
사회복지	보훈	4,535,653	3.7%
사회복지	주택	19,841,462	16.2%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542,783	0.4%
보건	보건의료	2,317,620	1.9%
보건	건강보험	7,786,025	6.4%
보건	식품의약품안전	396,130	0.3%
	계	122,272,555	100.0%

〈그림 2〉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부문별 예산 구성(2016년)



4.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산업별 예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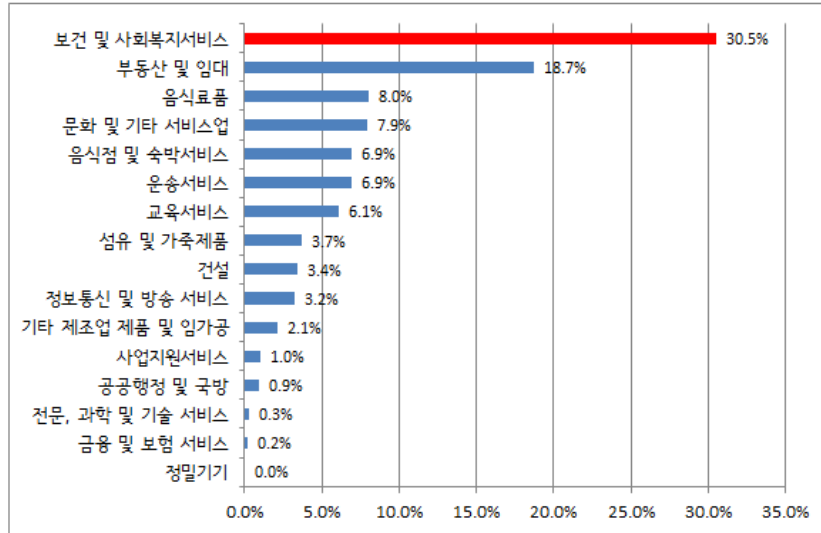
2016년 사회복지·보건 세출예산의 사업별 경비내역을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2014년 연장표)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사회복지·보건 예산 중 122조 2,725억 원 중 30%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투입되고, 부동산 및 임대 분야에 18.7%, 음·식료품비에 8.0%가 투입된다.

<표 7>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산업별 예산배분(2016년)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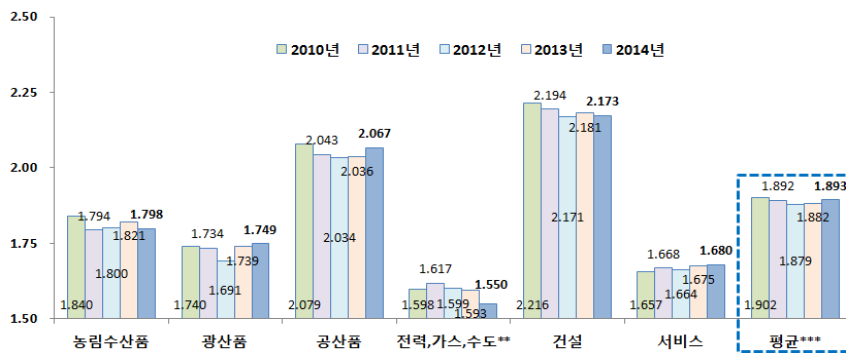
코드 번호	세부산업	산업별 배분금액	구성비	코드 번호	세부산업	산업별 배분금액	구성비
1	농림수산물	0	0.0%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	0.0%
2	광산물	0	0.0%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	0.0%
3	음식료품	9,787,246	8.0%	18	건설	4,104,626	3.4%
4	섬유 및 가죽제품	4,549,622	3.7%	19	도소매서비스	0	0.0%
5	목재 및 종이, 인쇄	0	0.0%	20	운송서비스	8,458,988	6.9%
6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492,166	6.9%
7	화학제품	0	0.0%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3,941,301	3.2%
8	비금속광물제품	0	0.0%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09,422	0.2%
9	1차 금속제품	0	0.0%	24	부동산 및 임대	22,880,669	18.7%
10	금속제품	0	0.0%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22,147	0.3%
11	기계 및 장비	0	0.0%	26	사업지원서비스	1,198,752	1.0%
12	전기 및 전자기기	0	0.0%	27	공공행정 및 국방	1,160,675	0.9%
13	정밀기기	8,535	0.0%	28	교육서비스	7,480,634	6.1%
14	운송장비	0	0.0%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37,321,068	30.5%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입가공	2,599,784	2.1%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9,656,920	7.9%
계(백만원)						122,272,555	100%

〈그림 3〉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산업별 예산배분 구성(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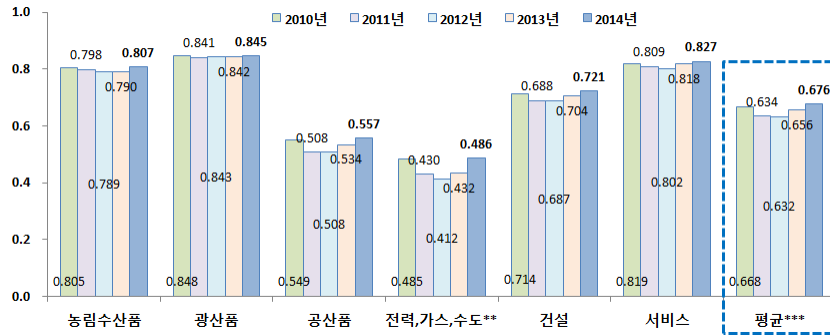
2) 전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4년 전체 산업연관효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6부문 평균 생산유발계수⁴⁾는 1.893으로 전년 1.882보다 높아졌다. 건설부문의 생산유발계수 2.173, 공산품 2.067으로 높은 편인데 비해 서비스 부문은 1.680로 낮은 편이다. 서비스 부문 중에서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1.770으로 전체 서비스부문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4) 수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국산품 1단위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입중간재의 크기를 의미한다.

2014년 우리나라의 6부문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⁵⁾는 0.676으로 전년 0.656보다 상승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율 상승 및 수입투입률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27로 가장 높고,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과 공산품은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각각 0.486과 0.557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상승폭은 0.054p, 0.023p로 가장 크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들이 우리나라 총산출을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당 생산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생산유발계수는 1.890으로 전년에 비해 0.009p 상승하였고, 수출 2.019, 소비 1.702로 전년 대비 각각 0.028p, 0.003p 상승한 반면, 투자 2.075로 0.008p 하락하였다. 구성비는 수출이 총산출의 41.2%를 창출하여 가장 컸고, 소비가 39.4%, 투자 19.4%이다. 투자는 생산유발계수는 높지만 투입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중이 낮다.

〈표 8〉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 및 구성비

구분	소비		투자		수출	
	생산유발계수	구성비(%)	생산유발계수	구성비(%)	생산유발계수	구성비(%)
2014	1.702	39.4	2.075	19.4	2.019	41.2
2013	1.699	38.8	2.083	18.7	1.991	42.5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들이 우리나라 총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산품 최

5)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이 생산한 국산품 1단위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한다.

중수요 1단위당 부가가치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최종수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98로 전년보다 0.020p 상승하였고, 항목별로 소비 0.797, 투자 0.744, 수출 0.564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구성비를 보면, 총부가가치 중에서 소비가 50.0%를 창출하여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출 31.2%, 투자 18.8%의 순이었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투자와 소비가 각각 0.6%p, 0.2%p 상승한 반면 수출은 0.8%p 하락하였다.

〈표 9〉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구성비

구분	소비		투자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	구성비(%)	부가가치 유발계수	구성비(%)	부가가치 유발계수	구성비(%)
2014	0.797	50.0	0.774	18.8	0.564	18.8
2013	0.785	49.8	0.733	18.2	0.541	18.2

3)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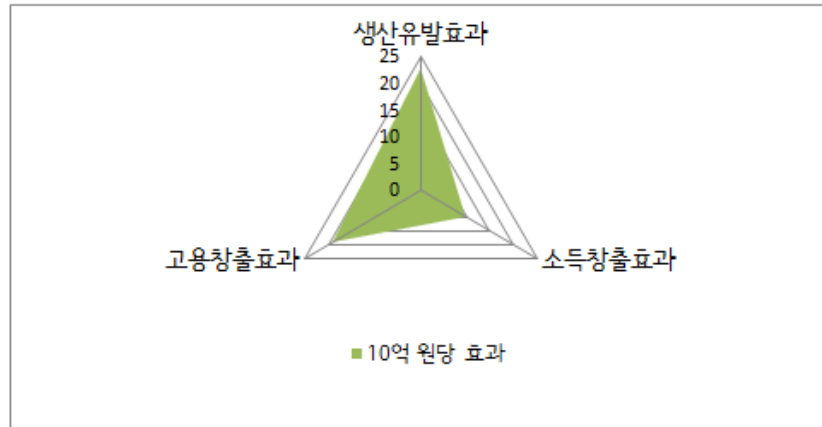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결과, 2016년 사회복지·보건 예산(경상가격 기준) 122조 2,726억 원의 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280조 682억 원이며, 예산지출 10억 원당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총 22.91억 원이다. 이는 복지예산 10억 원을 지출하면 총 22.91억 원의 직·간접적 생산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117조 7,392억 원으로 예산지출 10억 원당 유발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로 환산하면 총 9.63억 원이다. 2016년 사회복지·보건 예산(경상가격 기준) 122조 2,726억 원의 지출 중 인건비에 의해 총 232만 2,30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표 10〉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 원, 명)

		보건복지분야 (총예산 122조 2,726억원)
생산유발효과	총산출액	2,800,682
	10억 원당 효과	22.91
부가가치창출효과	총산출액	1,177,392
	10억 원당 효과	9.63
고용창출효과	총산출액	2,322,302
	10억 원당 효과	18.99

〈그림 4〉 사회복지·보건분야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2016년)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계수는 2.291로 우리나라 6부문 평균 생산유발계수 1.893보다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3으로 6부문 평균 0.6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예산 122조 원 중 현금 급여 및 인건비 지출이 65조 원에 달한다. 즉, 정부의 복지 예산 중 65조 원이 복지 수급자에게 급여로 지급되고,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이런 성격의 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수요 항목 중 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97로 투자와 수출보다 높고, 총부가가치 중에서 소비가 50.0%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예산 지출로 수급자와 관련 종사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소비가 확대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가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